

“새 혁신성장 동력 만들 것”

황의탁 도의원, 내년 지선 무주군수 출마 공식화

천마 소득작목 육성 구천동 특구 활성화 약속



황의탁 전북도의회 의원이 15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무주군수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황의탁 전북도의회이 내년 지방 선거 무주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황 의원은 15일 전북도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절점 소멸 위기에 가까워지는 무주를 그저 수수방관만 할 수 없다”며 “무주의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도원으로서 지난 4년간 무주군과 전북도민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고 자평하며, 노인요양병원 유치, 무주소방서 건립 노력 등의 성과를 설명했다.

그는 또, “전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를 단독 발의해 5000여명의 청년들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도의원 출마 당시 공약한 ‘의정활동비 전액 무주군 사회복지시설 기부’ 약속을 지켰다”고도 말했다.

황 의원은 “이제 소신을 담은 의지와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무주군수

에 출마해 경쟁하는 군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겠다”며 무주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황 의탁 의원은 먼저, “무주군의 희망봉인 향로산을 새롭게 재설계해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 대표 특화작목인 무주천마의 소득작목 집중 육성과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등반천 생태하천을 구천동 명소로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무주향년 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소상공인 기본소득 등을 도입해 군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황의탁 의원은 “무주에서 태어나 지금껏 군민 여러분들과 동고동락하며 살아왔고 농민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면서 “무주군민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두 쏟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유호상 기자

“순세계잉여금, 내년 예산에 추가 반영해야”

조지훈 전 경진원장 “소상공인 전면 지원 위해”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지난해에도 1000억원대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역시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데다 전주시가 2022년 본예산에 527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지만, 지난 5년간 살려 남은 순세계잉여금의 약 절반에 달하는 수준일 뿐이라고 조 전 원장은 설명했다.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장진흥원장이 비랑 끝에 선 소상공인을 전면 지원하기 위해 전주시가 적극 나서 “순세계잉여금을 2022년 예산에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해마다 관행적으로 1000억원대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축소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코로나19가 2년여 간 지속된 상황에서는 더욱더 여유 재원을 남기기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기도 하다.

조지훈 전 원장이 15일 내놓은 전주시 순세계잉여금 소상공인 전면 지원 제안 입장문에 따르면, 전주시가 한해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 1212억원, 2017년 1176억원, 2018년 1257억원, 2019년 962억원, 2020년 1053억원으로, 지난 5년 평균 1132억원이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는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세입의 일부를 쌓아둘 필요가 있지만 이처럼 관행적으로 매년 상당한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는 것은 되레 행정서비스의 과소 공급 비효율적 예산 운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

다”며 “무엇보다 2년여간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소상공인을 눈앞에 두고 지자체에서 여유 재원을 유지하는 것은 안일한 처사”라고 말했다. 조지훈 전 원장은 “정부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용재원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고, 가장 일선에서 소상공인의 울타리가 돼 줘야 할 지자체에서도 여유 재원을 적극 투입할 시기”라며 “경제의 근간이 더 무너지기 전에 이를 지켜낼 수 있도록 예산을 사용, 지금은 남기는 것이 아닌 필요한 곳에 모두 사용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이를 위해 소상공인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경제적 주체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신속하게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자원봉사대상 정부포상 전수식’

15일 전북도청에서 2021년 자원봉사대상 정부포상 전수식이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오른쪽)와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숲속학교·솔라스쿨 등 미래학교로 나아가야”

이항근 교육감 출마예정자 “탄소중립, 학교부터 실현”

교사 88.5% “환경교육 매우 절실” 답변



부·환경부장관과 함께 ‘2021 환경공동선언’을 했으나 아직 학교환경교육은 걸음마 수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전북교육청의 환경교육과정 개발 학교단위 실천 프로그램 보급 ▲환경교육 유초중고 교사연구회 40개(200명) 양성 및 성과 발표회를 통한 확산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50년 탄소 중립은 학교에서부터 실현해야 합니다.”

이항근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는 1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후위기로 인한 인류문명이 심각한 위협에 놓여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숲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숲속 학교 프로젝트, 학교육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솔라스쿨 프로젝트 등 학교에서부터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출마예정자는 지난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시도교육감 비상선언’을 하고 올해 9월 교육

부·환경부장관과 함께 ‘2021 환경공동선언’을 했으나 아직 학교환경교육은 걸음마 수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전북교육청의 환경교육과정 개발 학교단위 실천 프로그램 보급 ▲환경교육 유초중고 교사연구회 40개(200명) 양성 및 성과 발표회를 통한 확산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항근 출마예정자는 “학생들은 자연환경에 접촉해야 하고,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하다”며, 학교숲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숲속 학교(School in a Garden)’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성교육과 탄소중립을 함께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출마예정자는 산림청이 내년부터 법정 운동장 외에 공간을 최대 50% 숲으로 조성하는 숲속 학교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며, 적극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학교가 탄소 중립에 앞장서기 위해선 학교 육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솔라스쿨 프로젝트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출마예정자는 교육부가 탄소중립 학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연계해 솔라스쿨 프로젝트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항근 교육감 출마예정자는 “우리 학생들이 환경교육을 통해 생태시민성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숲으로 둘러싸인 학교에서 재생에너지로 생활하는 것이 미래학교의 모습”이라며, 전북 교육이 앞장서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자치연구소에 따르면 12월 9~1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 현장의 환경교육에 대한 갈증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초·중·고 교사 122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기후위기시대 환경교육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88.5%(108명)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문성 기자

새만금 지역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현실·기상공간 한눈에 파악 가능... 일조권·바람길 모의실험 등 의사결정 지원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승모)은 새만금 지역의 공간정보는 물론, 현실과 가상공간을 입체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새만금 지역의 현실과 가상공간을 시각화하고, 지상과 지하 공간 통합정보를 새만금의 특성에 맞게 가공·활용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의 개발·실시계획과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태양광 비람 등 기후환경 정보를 활용해 일조권과 조망권 바람길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사전에 수행할 계획이다.

이에, 입체적인 사업 관리와 함께, 과학적인 정책 결정 지원의 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인접 지자체·관계기관과 공유해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오유연 정보민원담당관은 “이번에 마련된 시스템을 통해 새만금 사업의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입주기업과 잠재적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메타버스 등 신산업분야에서도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라도 천년사 편찬 성과·의의’

호남 광역지자체 3곳 주최 학술대회 오늘 전남대서

전북도, 전남도, 광주광역시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라도천년사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원회)가 주관해 16일 전남대학교 갑남주기념홀에서 ‘전라도 천년사 편찬의 성과와 의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2018년 전라도 정도(定道) 천년을 기념해 3개 광역시도는 힘을 합쳐 전라도 천년사 편찬사업을 시작했고, 오는 2022년 하반기 33권의 거질을 발간할 예정이다.

편찬위원회는 내년도 책 발간에 앞서 4년간의 편찬사업을 마무리하며,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찬위원회는 지난 2018년 ‘전라도 역사의 연구 현황과 과제’ (12월 28일, 전주역사박물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18년도 학술대회가 전라도 역사 연구의 현황을 각 시대별로 살펴보고 어떠한 과제가 있는지 검토하는 자리였다면, 2021년 학술대회는 그 해답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편찬사업을 통해 6개 시대(선사시

대·고려·조선전·기·조선후기·근대·현대)별로 연구성과를 정리했다.

그동안 기존 연구에서 조명받지 못했던 새로운 주제 발굴을 통해 전라도 역사와 문화의 긍정적, 발전적 측면을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전라도 지역사에 대한 역사관 정립을 통해 전라도 위상제고 및 자존감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회식은 이재운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장의 개회사와 권혁남 전북연구원장의 축사로 진행된다.

본격적인 학술대회는 김인걸 국사편찬위원장의 전라도 천년사와 전라도의 정체성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전라도와 관련된 6개의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조범중 우석대 교수의 ‘후백제의 역사적 성격 및 후백제 문화감성’, 한정훈 목포대 교수의 ‘중세 해운 물류와 전라도’, 이동희 예원대 교수의 ‘조선시대 군현관계와 수령제’, 조광철 광주광역시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의 조선시대 전라도의 산업과 문화,

이승훈 고려대 강사의 전라도 농업의 발달과 사회적 변화, 노영기 조선대 교수의 전라도의 5.18 민주화 운동 등의 발표를 통해 전라도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한다.

종합토론은 이재운 편찬위원장을 중심으로 강봉룡 목포대 교수, 이종효 한려대 교수, 임심화 전남대 강사, 김택진 광주교육대 교수, 원도연 원광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주제 발표에 대한 열린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재운 편찬위원장은 “전라도 천년사 편찬사업은 전북도, 전남도, 광주광역시 3개 광역시도가 합심해 진행한 사업으로, 이번 학술대회는 4년간에 걸친 편찬사업의 성과를 알리는 자리이다”며 “동시에 전라도의 역사가 한 국가에서 혁신과 희망의 역사로 새로이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도 천년사 학술대회는 코로나19 방지와 폭넓은 참여를 위해 유튜브 채널 ‘전북연구원’에서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며, 누구나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군산의료원 노조 파업 예고 속 오늘 전북노동위서 3차 조정

군산의료원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오는 16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3차 조정이 열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전북도는 군산의료원 정상화와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엄중한 시기인 만큼, 노조는 파국을 막기 위한 대화와 교섭에 최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지부는 “군산의료원과 우리 노조는 직원들의 열의한 임금과 노동 조건 개선, 공무직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사측의 불성실 교섭과 전북도의 수수방관 속에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며 “지난달 28일 전북지노위에 쟁의조정신청을 했고, 지난 8일 한차례 조정 연장을 통해 마지막 3차 조정회의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단체에 따르면 군산의료원은 1998년 2013년까지 원광대학교병원에 위탁되면서 임금체계·직제가 위탁 병원 체계로 변경됐다. 이후 2014년 전북도 직영 병원으로 전환했다. /뉴스

공공기관 협약 실효성 ‘UP’

신영대 의원, 체결 현황 등 의무 공시 법안 대표발의



공공기관 업무협약 체결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체결 현황과 추진 현황, 이행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국내외 기업, 지자체, 각종 단체 및 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업무협약의 체결·추진 현황, 이행 결과 등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협약 성과 등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업무협약

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에도 공공기관이 실제 쌍기용으로 업무협약을 맺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이행 성과에 대한 점검도 하지 않은 채 체결하는 업무협약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전시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에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업무협약·양해각서·의향서 등 체결현황과 이행결과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과 소송현황, 법률자문 현황 및 소송대리인, 고문변호사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경영공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협약의 투명성 제고와 이행 강제력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